경제해설자료 5

실업이론의 발달과 쟁점

1991. 7

文 宇 植 著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실업이론의 발달과 쟁점

1991. 7

文 宇 植 著

국민경제제도연구원

빈 면

경제해설자료를 펴내면서

오늘날 우리경제는 밖으로부터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경제개혁 및 UR협상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재편, 세계시장에서의 후발개도국의 추돌위협 등 여러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으로부터는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고도성장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제조업의 활력이 쇠퇴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하는 가운데 민주화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가치관의 혼돈마저 나타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전환기적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랑스런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실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근면과 슬기를 시급히 되찾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경제행태를 정립함으로써 자유와 창의를 창달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풍토를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경제는 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선진경제로 진입하게 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반국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는 저희 연구원은 이에 보탬이 되고자 기본적인 경제원리 및 현상, 주요한 경제문제등에 대한 알기쉬운 해설자료를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그만 책자가 독자 여러분의 뜻있는 반려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채찍질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91년 7월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원장 **엄 영 석**

빈 면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 5

Ⅱ. 실업개념의 변천 ····· 6
1. 실업관의 변천과정 ····· 6
2. 실업의 원인과 Keynes-Hayek 논쟁 ····· 12

Ⅲ.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문제 ····· 17
1. 필립스 커브와 실업-인플레간 딜레마 ····· 18
2. 합리적 기대와 조정지연 현상(Hysteresis) ····· 22
3. 임금의 경직성과 수평적 필립스 커브 ····· 24

Ⅳ. 현대 실업의 제양상 ····· 28
1. 케인지언 실업과 고전적 실업 ····· 29
2. 고용과 기술진보 ····· 31
3. 탈산업화와 서비스부문의 고용확대 ····· 34

〈참고문헌〉 ····· 38

빈 면

Ⅰ. 문제의 제기

실업은 현대 경제의 중심문제로서 이는 사회적으로 생산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생활의 낭비를 의미한다. 실업이 경제질서 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초기 단계를 지나 자본이 집중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이다. 이 당시 실업은 빈곤과 같은 의미로서 이해되었고 실업문제는 곧 빈곤퇴치에 관한 문제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취업의 불안정성과 장기적, 만성적 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에따라 실업은 새로운 형태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실업문제는 완전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노동력 수급의 적정화와 배치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고용이 완전고용상태 가까이 유지되는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과 이로 인한 개인소득증대는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압력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70년대를 경계로 실업문제는 경기침체하의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최근 들어 실업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많은 문제들, 예컨대, 생산성(生産性)의 감소, 기술진보, 탈산업화등에 밀접하게 관련된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실업이론은 이러한 역사적, 현실적 사실의 반영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본 책자의 목적은 이러한 실업이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실업과 관련된 몇가지 과제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사상사적 관점에서 실업관의 변천과정과 실업의 원인에 관한 Keynes-Hayek 논쟁을 간단히 다룬다(Ⅱ장). 다음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를 다루고(Ⅲ장) 마지막으로는 생산성, 기술진보, 탈산업화등 현대 경제의 문제들과 실업간의 관계를 조사한다(Ⅳ장).

Ⅱ. 실업개념의 변천

실업에 대한 개념은 고용시장에 대한 개념의 발달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정립되었다. 고용과 실업에 대한 개념의 발달은 경제이론적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우선 첫째는 사상사적 입장에서 실업관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 보고 둘째로 실업의 원인에 대한 금세기 초의 대논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실업관의 변천과정

가. 고전학파 이전의 실업관

고전학파 이전의 중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업이란 계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산업국가에서의 실업개념과는 그 성격에 있어 크게 달랐다. 즉 산업혁명 이전에는 고정투자활동과 관련한 실업은 실제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못하였다. 이 시대의 경제분석의 초점은 과잉생산·과소생산으로 이어지는 농업수확량의 변동에 두어졌고 따라서 농업생산변동이 고용변화를 가져 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농업이 경제의 중심부문이었던 17세기의 영국을 보면 대부분의 실업이 농업수확량의 계절적 변화 또는 수확량의 감소에 기인

하였다. 산업부문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실업은 제분산업의 원동력인 수력발전이 기후조건에 큰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역시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중상주의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실업은 작업장에서 일을 회피하려는 성향과 여가에 대한 선호란 의미에서 자발적 실업이었으며 이에따라 실업자들은 이른바 '게으르고 방탕한 계층(an idle and debauched populace)'으로 간주되었다[1]

나. 고전학파

중상주의시대를 거쳐 고전학파 시대로 접어 들면서 임금노동이 조직화되고 일반화되었다. 고전학파는 이에 따라 소득의 사회적 분배에 관한 법칙, 특히 임금수준의 결정에 관한 법칙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고전학파의 임금결정이론은 인구학적 메카니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임금생계비설(subsistence theory of wages)의 성립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이 일정 생계비 수준이상으로 증가하면 총인구가 가용자원에 비해 더 크게 증가(Malthus의 법칙), 그 결과 임금수준은 다시 최초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귀하고 인구감소가 발생한다.

임금생계비설은 몇가지 면에서 불완전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노동력이 완전고용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어떻게 실질임금이 생계비 수준이상에서 고정되는가 또는 실질임금과 인구증가를 연결시키는 인구학적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는가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이 희소생산요소가 아니었던 고전학파의 이론틀하에서 잘 설명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8~9세기의 영국에 있어 전례없는 인구성장이 실질임금의 상승과 동시에 발생하였고 또 한

---

1) M. Blan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Cambridge Univ. Press, 1962

편에서는 출생률 그자체외에 사망률의 감소와 수명연장등에 의해 인구학적 법칙이 작용함으로써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임금생계비설은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 Marx의 실업분석

산업혁명 초기를 주요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Marx의 분석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노동시장과 실업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다. Marx는 임금기금의 결정에 대한 고전학파의 인구론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기능에 의한 설명을 제시한다. 즉 생계비 수준에 일치하는 임금수준의 결정은 자본가 계층이 임금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조적인 노동력공급 초과, 즉 산업예비군(産業豫備軍)을 유지하였을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Marx는 고용문제를 자본축적과 생산양식의 문제내에서 파악한다. 자본축적은 가변자본인 노동에 대해 불변자본인 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업예비군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Marx에 있어서 실업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조정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라. 신고전학파의 실업

신고전학파는 노동을 시장경제의 일반적 법칙을 따르는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노동을 일반균형분석의 체계내에서 통합한다. 즉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은 노동의 비용이 한계생산력에 일치할 때까지 노동을 수요하고 노동자는 임금이 노동의 비효용과 같아질 때까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실질임금이라는 가격의 변동을 통해 균형을 달성한다.

신고전학파에서는 고용시장의 개념이 명확하다. 그러나 신고전학파는 시장경제가 항상 완전고용을 달성한다고 생각한다. 즉 신고전학파는 조정시차나 부문간 경직성으로 인한 단기불균형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시장은 항상 실질임금의 변화에 의해 균형된다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신고전학파에서는 임금이 균형실질임금 이하로 낮은 경우 노동에 비해 여가를 더 선호하는 자발적 실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 케인지언 혁명과 실업

1930년대에 대공황과 더불어 대규모 실업의 발생은 신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는 자발적 실업의 개념에 대한 비판을 가져왔다. Keynes의 고용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비판하고 실업에 대한 해결에 있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Keynes가 신고전학파 이론에 대해 비판한 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2)]

우선 노동시장은 재화시장과 독립적이지 않고 이에 종속된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재화의 수요에 의해 단기적으로 결정된다. 재화시장의 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서로 균형된다는 것을 의미하나 이러한 균형은 반드시 노동력의 완전고용에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기업이 결정하는 투자수준이 감소하면 이는 수요하락을 통해 고용수준의 감소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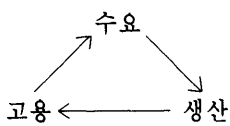
두번째 개인의 금융자산 선택행동은 노동력의 완전고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Keynes에 따르면 개인은 이자율수준에 따라 저축을 금융자산과 화폐의 형태로 나눠 보유하며 두가지 자산에 관한 개인의 증

---

2) Keynes의 일반이론에서 지칭된 고전학파는 사실상 오늘날의 신고전학파에 가깝다

재행동(仲裁行動)은 주어진 통화량 수준에서 이자율을 결정하고 이것이 차례로 투자 및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이자율 수준이 매우 낮다면 각 경제주체들은 그 자산을 모두 화폐로 보유(이른바 유동성 함정(流動性 陷穽)현상)할 것이고 이로부터 총수요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경우 화폐의 추가공급은 기업에게 대출되어 투자를 증가하는 데 사용되기 보다는 모두 퇴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업을 줄이는 데 무력하다.

거시균형이 불안전 고용하에서 가능한 것을 보인 Keynes 고용이론의 기본체계를 살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된다.



여기서 수요-생산간 고리는 케인즈이론의 핵심인 유효수요이론을 구성하며 두번째 생산—고용간 고리는 단기 생산함수로 표시되듯이 노동시장과 재화시장간의 연결성을 나타낸다. 세번째 고용-수요간 고리는 수요가 소비함수를 통해 생산에 의해 창출된 소득에 의존한다고 하는 피드백(feedback)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eynes에게 있어 실업의 근본적 원인은 총수요부족에 있으며 총수요부족은 실업으로 인하여 총소득 즉 구매력이 부족한 경우 생긴다. 여기에 수요와 실업간 악순환(vicious circle)이 발생한다. 즉 기업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에따라 생산과 고용수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노동자가 고용을 찾지 못하면 경제전체의 임금소득이 그만큼 감소되고 이것은 결국 소비감소 → 수요감소를 초래한다. 총수요감소는 다시 고용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로부터 실업에 대한 Keynes의 처방은 공공지출의 확대 또는 민간투자의 증가에 있다는 것은 쉽게 유도된다.

바. Keynes이후

케인즈의 유효수요에 의한 고용결정이론은 Hick에 의해 신고전학파의 일반균형체계내에서 통합되고 IS/LM이라고 하는 신고전학파 종합이론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종합은 Keynes의 유효수요이론을 단순히 화폐착란(貨幣錯亂)에 기인한 것으로 봄으로써 유효수요 자체가 실질임금과 별도로 고용함수의 인자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 즉, 수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총수요확대 → 명목가격증대 → 화폐착란으로 인한 주어진 명목임금의 실질구매력 하락 → 기업의 노동고용증가라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전학파 종합이론은 생산자가 재화시장에서 할당(割當)됨으로써 가격변화가 생산량증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에따라 신고전학파 종합이론이 Keynes의 고용이론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비판되는 가운데 Benassy, Grandmont, Malinvaud등에 의해 대변되는 이른바 불균형학파(혹은 新케인즈안(Neo-Keynesian))와 Weintraub, Davidson에 의해 대표되는 후기 케인지안학파(Post-Keynesion)라는 두 흐름이 생겨 났다. 불균형학파는 신고전학파체계에서 유효수요에 의한 고용결정이론을 통합하여 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주어진 국민경제가 고전적 체계(classical regime) 혹은 케인즈적 체계(keynesian regime)에 있느냐에 따라 각 체계내에서 상이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전적 체계내에서는 임금상승은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케인즈적 체계내에서 임금상승은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킨다. 한편 후기 케인지언학파는 완전경쟁하의 신고전파 가격결정이론과 이에 입각한

일반균형체계를 배격하고 불완전경쟁하에서 마크업가격결정(mark-up pricing)을 통한 행동원리를 강조하면서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대해 보다 충실하고 원리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경제는 생산비에 적당한 이윤을 가산(mark-up)하는 기업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가산되는 마크업율은 관계된 기업의 독점도 또는 성장에 필요한 내부자금의 확보등에 의해 결정된다. 마크업율은 동시에 임금-이윤간 분배구조의 척도로서 사용된다.

2. 실업의 원인과 Keynes-Hayek 논쟁

실업의 개념과 원인은 경제상황에 따라, 또는 이론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실업 더 나아가 경기침체의 원인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20세기 들어 실업의 원인에 대한 입장은 경기변동이론의 발달과 더불어 과소소비(under-consumption)이론과 과잉투자(over-investment)이론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로서 Keynes와 Hayek를 손꼽을 수 있다. Keynes의 유효수요이론은 전자의 대표적 이론이고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내에 속해있는 이론들(특히 Böhm-Bawerk와 Wicksell)을 종합함으로써 Keynes이론에 대한 경쟁적 이론체계를 제공한 Hayek의 경기변동론[3]은 후자를 대표한다. 1930년대 양 학자간의 팽팽한 이론적 대립은 50~60년대 각국 정부에서 케인지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Keynes이론의 우세로써 종결되었다. 그러나 70년대초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계속됨에 따라 케인지안 정책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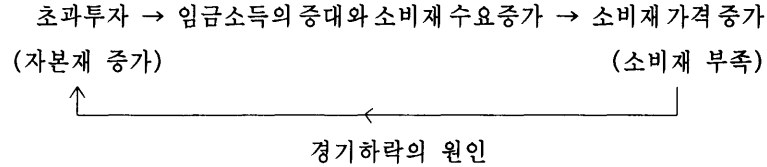
3) 특히 Hayek, *Price and Production*, 1931, 불어판 1974, 참조.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따라 다시 Hayek의 이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Hayek의 케인지언 정책에 대한 입장은 *Price and Production*이라는 책의 서문(1974)에 잘 드러나 있다.

'Keynes의 기본입장은 고용수준과 총수요간 가정된 간단한 양의 상관관계로부터 실업은 총수요확대에 의해 퇴치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데 있다. Keynes이론의 현실적 적용은 실업의 계속적 예방을 실패로 만들고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대하였던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양상의 실업을 초래하였다.'(1974)

Hayek의 이론체계를 살펴보기 앞서 우선 경기침체와 실업발생의 원인에 대한 과잉투자이론과 과소소비이론의 특징을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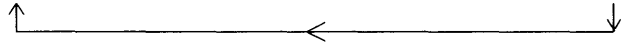
과잉투자이론은 실업의 원인이 소비수요의 부족에 있기보다는 저축에 대한 투자의 초과에 있다고 본다. 예컨대 자본재의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투자지출을 늘이는 경우 소비재생산이 충분히 증가하기 전 기업의 구매력이 생산요소의 공급자인 노동자소득의 증대로 이전되고 이에따라 소비재수요와 가격이 증가한다. 소비재 가격의 상승은 자본재 부문의 자원을 소비재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최초 시작되었던 투자활동을 억제, 경기하락과 실업을 발생시킨다. 이를 간단한 도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과소소비이론은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시차가 아주 짧다고 가정한다. 즉 과잉투자이론에서는 투자증가에 의한 자본재 생산으로부터 소

비재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동안 소비재공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데 비해 과소 소비이론에서는 소비재생산이 빨리 이뤄질 수 있고 이에따라 소비재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 소비재가격이 하락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경기하락과 실업의 원인은 소비재 생산증가에 대한 수요의 부족에 있다. 이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증가 → 생산재로부터의 소비재 생산증대 → 소비재 가격의 하락
(소비재 생산 과다)



경기하락의 원인

Hayek는 Böhm-Bawerk의 생산구조문제와 Wicksell의 화폐적 균형(monetary equilibrium)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과잉투자이론을 완성시킨다. Hayek에게 생산구조란 노동 또는 토지와 같은 원천적 생산요소가 중간생산재인 자본재와 결합되어 최종단계의 소비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생산과정을 의미하며 화폐적 균형이란 자연이자율과 화폐이자율간의 균형 혹은 저축과 투자간의 균형을 의미한다. 화폐적 균형이 깨어졌을 경우의 조정은 생산구조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즉 생산기간의 확대 또는 단축을 통해서 일어난다.

조정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지금 은행이 자연이자율에 대해 화폐이자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에게 대출을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이 경우 기업은 늘어난 화폐를 가지고 투자증가, 즉 중간생산물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려 할 것이고 가계의 소비활동 변화가 없다면 소비재가격에 비해 중간재인 자본재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자본재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소비재생산에 사용되었던 자원들이 자본재생산으로

이동되고(이른바 강제저축(forced saving)) 이에따라 생산기간이 확장된다.[4] 즉 경기상승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상승국면은 지속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경기후퇴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은행을 통해 기업에게 공급되었던 통화가 임금등으로 지불됨에 따라 노동자소득의 증가로서 나타나고 이에따라 소비재수요와 소비재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자본재에 대한 소비재가격의 상승은 소비재생산으로 자원을 이동시키고 생산기간을 단축시킨다. 즉 경기가 후퇴한다. 특히 이때 중간재인 자본재중에 최종소비재 생산으로 쉽게 이동될 수 없는 특수한 자원들이 있는 경우 유휴생산시설이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중간재사용의 중단으로 인해 공급초과가 된 노동력의 일부가 비자발적인 실업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Hayek에 있어서 경기침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폐공급초과에 의해 강제된 저축(forced saving)이 있는 경우에만 일어난다. 가계가 자발적으로 저축을 증가(voluntary saving)하는 경우에는 소비재가격의 상승이 없기 때문에 경기침체란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침체에 관한 이러한 Hayek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反)케인즈적인 결론을 가져 온다.

첫째, 경기침체의 요인은 Keynes가 주장한 바와 같이 소비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부족에 있다. Hayek는 통화창출에 의해서 조달된 소비수요의 증가는 유휴생산시설과 실업을 가져온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서 자발적인 저축의 증대를 강조하였다.

---

4) 생산기간의 길이와 자연이자율간에는 역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기간의 확장은 곧 자연이자율이 하락하는 것과 동등하다. F. Lutz, *The Theory of Interest*, Reidel Dordrecht, 1967 참조.

둘째, 보다 많은 소비가 보다 많은 투자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작용한다. 즉 가속도 원리가 역으로 성립된다. Hayek에게 유휴시설의 존재는 소비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수요가 지나쳐서 보다 긴 시간을 요하는 생산과정에 자원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셋째, 임금상승의 효과에 관해서 Hayek는 Keynes와 반대의 논리를 전개한다. Keynes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과소소비이론의 신봉자로서 임금억제를 통한 지나친 이윤확대는 과도한 저축을 통해 경기침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후에 N. Kaldor가 이론적 모델로 전개하였던 바와 같이 이윤에 대한 저축성향이 임금소득에 대한 저축성향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의 감소와 이윤의 확대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5] 이에 대하여 Hayek는 고전학파적 입장에서서 임금을 유효수요측면에서 보다는 생산원가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임금억제가 경기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신용창출의 결과로서 가격상승이 일어나는 경우 임금은 시차를 두고 상승함으로써 경기확대가 가속화된다. 그러므로 임금상승은 Keynes에게는 경기부양의 효과를 가져 오는 데 비해 Hayek에게는 경기억제의 효과를 초래한다.

---

5) N. Kaldor, "Alternative Theories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 Studies, 23, 1956 참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최초 Hobson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G. Harberler, *Prospérité et Dépression*, Géneve, 1939 참조.

Ⅲ.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문제

1960년대 초까지 케인지언 이론은 큰 논란없이 수용되었고 총수요관리 정책에 힘입어 고용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서 70년대 큰 문제가 되었던 세계적 인플레이션현상은 노동시장에서의 조정과정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Phillips 커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명목임금, 물가, 실업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정책과 실업퇴치정책간의 수단간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케인지언 정책에 대한 통화론자들의 비판이 잇달았다. 예들 들어 Friedman과 Phelps같은 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율간에 존재하는 역관계는 인플레이션예상이 정확하게 기대되지 않는 단기적 상황하에서만 성립하고 장기적으로는 화폐착란이 사라짐으로써 경제의 실질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화론자들의 대두는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지언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켰다. 통화론자들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자율적으로 조정(self-regulating)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들에 따르면 70년대의 경제적 난관도 정부의 개입이 적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거시경제학자들에 의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정책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다루기 위하여 실업과 인플레이션간의 관계를 본다. 1절에서 Phillips커브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어떻

게 전개되어 왔는가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실업문제와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특히 2절에서는 임금의 경직성과 비용상승 인플레이션간의 관계를 살펴 본다.

1. 필립스커브와 실업-인플레이션간의 딜레마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 Phillips는 1861년부터 1957년까지 영국에 있어 임금증가율과 실업증가율간에 역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관측하였다. 또한 관측된 관계는 비선형의 형태이었으며 따라서 실업율이 아주 높은 때에는 임금증가가 약간 완화되었고 반면 실업률이 낮은 때에는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였던 Phillips의 경험적 연구는 경제학자들에게 큰 반향을 가져 왔다. 명목임금과 실업간 역의 안정적 관계는 그 후 수많은 계량적 연구를 거치며 케인지언 경제분석이 결핍하고 있는 '임금의 변화법칙'을 제시한다. Phillips의 경험적 관계는 1960년도에 이르러 Lipsey의해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첫째, 다른 모든 시장에서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가격(명목임금)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하락한다.

둘째, 뿐만 아니라 초과노동수요와 실업율간 비선형의 역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임금상승율은 실업율이 높은 때에 비해 낮은 때에 더 빠르게 증가한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전혀 동반하지 않는 실업율(대략 5.5%)이 유도된다. 이때의 실업율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간 균형이 이뤄지는 경우의 실업율을 의미한다.

1960년대는 인플레이션율이 임금상승율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변화, 즉 임금상승율은 물가상승율에 노동생산성증가율을 더한 비율로

증가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각국의 정책담당자들이 실업과 인플레이션간 역의 상관관계에 대해 점차 주의를 증가하여 왔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실업율에 관한 Phillips의 경험적 관계와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증가에 관한 위의 사실로부터 인플레이션과 실업율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얻어지고 이 결과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목표간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즉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은 상호 독립적인 방법으로 추구될 수 없으며 필립스커브상을 따라 실업율과 인플레이션간의 목표가 동시선택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필립스 커브는 60년대말부터 각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였다. 즉 커브가 상방이동됨으로써 고용사정이 호전됨없이 물가만 상승,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음의 표는 OECD제국에서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1974년을 계기로 극명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OECD제국의 평균으로 볼 때 73년 이전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율이 1.9%와 5.0%에서 74~9년간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5.0%와 10.1%로 급등,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율간의 관계가 상방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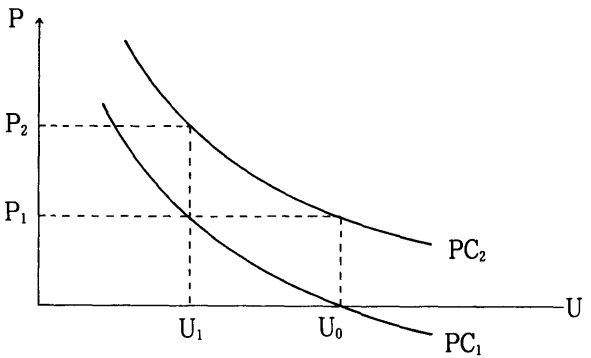
〈표 1〉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

(단위 : %)

구 분	실 업 율			인 플 레 이 션 율		
	63~73	74~79	80~87	63~73	74~79	80~87
미 국	4.5	6.7	7.6	3.6	8.6	5.8
영 국	3.2	5.3	10.5	5.3	15.7	8.0
프 랑 스	2.1	4.5	8.9	4.7	10.7	8.4
독 일	0.8	3.2	6.1	3.5	4.7	3.1
일 본	1.3	1.9	2.5	6.2	10.2	2.8
OECD평균	1.9	5.0	8.6	5.0	10.1	6.7

자료 : J. Cornwall, *The Theory of Economic Breakdown*, 1990

실업율과 인플레이션간 관계의 상방이동은 Phelps와 Friedman과 같은 통화론자들의 대두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이들은 위의 필립스 커브에 기대를 고려한 이른바 '기대부 필립스 커브(expectations-augmented Phillips curve)'란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따라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율간 역의 상관관계는 실업율과 실제의 인플레이션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기대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율간의 관계로서 해석하였다. 또한 기대는 과거의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하여 적응적(adaptive)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지금 통화당국이 총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실업율을 U_0에서 U_1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P_1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기대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이에따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진다. 그러므로, 실업율이 U_1에서 계속 유지되려면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증가해서 실업율과 인플레이션간 단기 필립스 관계가 상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즉 U_1에서의 실업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P_2로 증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실업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대(期待)의 변화가 필요불가결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Friedman은 이 과정을 화폐착란을 이용해서 설명한다. 지금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하게 예측하여서 기대(期待)인플레이션율이 실제의 인플레이션율과 일치하는 반면 노동자는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예측,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전기(前期)의 인플레이션율과 같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임금이 증가하고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하여 기업에게는 실질노동비용(실질임금)의 변화가 없다고 하여도 노동자는 명목임금에 비해 물가가 더 작은 폭으로 상승하여 그의 실질소득(실질임금)이 증가한 것처럼 착란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그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따라 관련된 경제내의 실업율은 감소하게 된다. 즉 단기필립스 커브가 성립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기대가 점차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수렴하고 실질임금이 증가했다는 착란이 사라짐에 따라 노동공급은 다시 줄어들고 이에따라 실업율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Friedman은 U_0에서와 같이 인플레이션 기대의 변화가 없는 경우의 실업율을 자연실업율이라 지칭하였는 바 필립스 커브는 장기적으로 이 자연실업율 수준에서 수직적인 모양을 취한다. 다시 말하자면 장기적으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간의 딜레마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이론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정책면에서 보았을 때 경기조절정책을 통해 자연실업율 이하로 실업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경제가 최초에 자연실업율에 있는 경우 정부가 실업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수요확대정책을 추구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총수요 증가가 가격을 상승시키고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착란을 줌으로써 단기 필립스 커브상을 따라 실업율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점차 노동자의 기대가 완전하게 실현됨에 따라 필립스 커브는 상방 이동하고 이에따라 경제는 다시 자연실업율로 복귀하고 오직 인플레이션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

져온다. 실업율을 자연 실업율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론면에서 Friedman의 분석은 또한 불안전고용과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면에서 고전학파에서 신고전학파로 내려오는 전통에의 복귀를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외생적인 충격에 의해 교란되지 않는 한 경제가 오직 자연실업율이란 자발적 실업상태로 균형을 찾아간다고 하는 생각은 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Walras의 '시장경매자(auctioner)'라는 개념에의 복귀를 의미한다.

2. 합리적 기대와 조정지연현상(hysteresis)

Phelps-Friedman모형은 기대형성에 관한 합리적 기대가설로 인해 극단적인 신고전학파, 즉 새거시경제학(new classical macroeconomics)의 모형으로 발전된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의 모형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변수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행동방정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변수들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기대형성은 보통 이 변수들에 대한 과거의 예측오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Phelps와 Friedman의 적응적 기대(適應的 期待)는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즉 인플레이션의 기대형성에 있어, 경제주체가 실제의 인플레이션을 저평가하였을 경우 다음기에 그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상향조정 하고 반면 실제의 인플레이션율을 고평가하였을 경우 다음기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하향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적 기대는 한가지 중대한 결점을 갖는다. 적응적 기대는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총수요, 실업, 산출량, 화폐공급과 수요등과 같은 거시변수들로 구성된 관계방정식에 의해서 실제

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이러한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기계적인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기대형성에 있어 체계적인 오차가 존재한다.

합리적 기대가설은 경제모형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쉽게 이용가능한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경제변수들에 대한 예상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이 가설하에서는 체계적인 예측오차가 발생할 수 없다. 즉 경제주체들은 기대치가 실제로 실현되는 값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기대를 형성한다. 물론 관계된 모형이 비체계적인 변동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면 예측오차는 불가피하나 이것은 완전히 임의(random)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대가설을 채택하는 경우 실제의 실업율과 자연실업율간의 격차도 임의적(random)이게 되며 이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체계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여도 이에 영향을 줄 수 없다(超中立性(superneurality)명제). 왜냐하면 정부의 체계적 행동이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를 통하여 예상에 반영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기에 있어서조차 실업율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그 결과 경제는 자연실업율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필립스 커브가 단기에 있어서도 수직적이어서 실제의 실업율이 자연실업율을 계속적으로 이탈할 수 없다고하는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 있어 관찰된 사실과 괴리된다.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982년 이래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은 5%정도인 반면 실업자는 대략 300만명이다. 실업과 인플레이션간 관계가 대략 3년간에 걸쳐 안정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자연실업율이 약 13%인 수준에서의 균형상태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정기적인 실업통계가 가능하기 시작하였던 1851년 이래의 평균실업율의 2배 반에 해당하는 높은 실업율이었다. 특히 1950~60년대에 기록한 3.5%의 인플레이션율과 2%의 실업율에 비하면 더욱 더

뚜렷하게 대조가 된다.[6] 이러한 사실은 다른 OECD제국에서도 비슷하게 관측되었다 앞의 (표1 참조). 이에따라 자연실업율이 한점에서 유일(唯一)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생겼다. 히스테레시스(hysteresis)이론은 이에 대한 설명을 준다.

히스테레시스는 일종의 조정지연(lagged adjustment)현상, 특히 어느 한 변수의 상태가 과거 그 변수의 움직임에 의존함으로써 결정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자연실업율은 결정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자연실업율 자체도 어떠한 자연스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인플레이션율을 가속화 하지 않는 실업율(NAIRU :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이란 용어로 대체되었다. 히스테레시스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현상은 실업으로 인하여 이를 겪는 노동자의 작업태도나 구직행위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긴다. 즉 자연실업율은 현재의 실제실업율에 의존하게 된다.

3. 임금의 경직성과 수평적 필립스 커브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론자와 합리적 기대론자들의 분석은 경쟁적 시장구조 안에서 초과수요나 공급이 있는 경우 가격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자연실업율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율로 계속 조정된다고 하는 신고전학파 이론을 크게 부각시켰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후기 케인지안 학파는 초과수요나 공급이 있어도 임금이나 가격의 변동을 유도하지 못하며 시장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 필립스커브자체

---

6) P. Sinclair, *Unemployment : Economic Theory and Evidence*, Basil Blackwell, 1987, pp225~6 참조.

가 수평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임금이 시장력과 괴리되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임금의 경직성은 실업율과 무관하게 임금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필립스 커브는 수평적이게 된다. 전절의 〈표1〉에서 나타났듯이 1980년대 들어 실업률이 인플레이션율과 관계없이 OECD각국에서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임금노동자의 출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을 구성하는 임금은 지난 1세기이래 경직화 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임금의 사회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임금결정은 개별노동시장에서가 아니라 사회차원에서 논의되는 방식을 따라 왔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가. 노동조직의 변화

개별적 임금수준이 노동자의 한계생산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신고전학파적 사고방식은 20세기초 과학적 관리론을 주창한 미국의 Taylor에 의해 구현되는 듯 보였다. 당시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체계적 기업활동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능률이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었으며 Taylor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작업능률과 방법을 향상시키고 과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에게는 그들 자신의 작업성과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자유재량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노동자는 단지 관리자에 의해 지시된 것만 수행하면 생산성의 증가와 함께 더 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새로운 관리는 관리자에게 작성성과를 계획하고 통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리자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과학적으로 분석된 성과지표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Taylor식의 노동조직은 생산기계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 왔다. 그러나 연속작업의 출현, 작업반에 의한 공동작업, 기계사용의 확대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산성 및 성과에 대한 측정은 더욱더 불명확해지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공동작업의 경우 그 성과를 작업성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별 생산성의 측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개별적 생산성의 개념이 희석되고 Taylorism의 기계적 인간관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고 관리자와 협상된 공동의 목표위에 스스로 작업의 속도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의 기술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러한 흐름의 탄생은 노동자 집단내에 상조작용(相助作用 : synergy)이 있다고 하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총생산성은 생산단위의 개별적 생산성의 단순총합이 아니며 이러한 개별적 생산성은 더구나 측정될 수 없다.

또한 후기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3차산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오랫동안 '비생산적(非生産的)'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서비스부문에서의 생산성문제는 더욱 미묘하다. 왜냐하면 각 생산요소의 공헌도를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위에 '생산'이 무엇인지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부문중의 많은 거래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평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개별적인 생산성의 의미는 점차 축소되었고 생산단위의 성과를 전체적 입장에서 조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임금결정의 사회화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그 힘이 강화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단체교섭 형태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임금결정은 종종 노동자와 기업대표간

체결된 단체교섭의 형태를 취했으며 이 교섭에 있어 시장원칙보다는 형평성의 원칙이 중요시되었다. Scitovsky는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한다.[7] 첫번째 단계는 19세기말과 같이 공장제가 발달하였던 시기이다. 두번째 단계는 그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크게 일어 났던 시기이다. 세번째 단계는 전후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고용주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즉 고용주는 생산물시장에서 가격결정자(price-maker)이고 노동시장에서 임금결정자(wage-maker)이었다. 고용주는 협상력의 우세를 확보함으로써 그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자는 임금증가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격수준도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이 활발해 지기 시작하면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화폐임금과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가져 오고 상방신축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강화와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영국에서는 대략 명목임금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였던 1800년대에서부터, 프랑스와 독일은 이보다 조금 늦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1949년의 경기침체를 경계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세번째 단계는 노동조합의 힘이 더욱 강력해져서 노동조합이 노사분규에 따른 비용을 흡수할 수 있었던 시기이다.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채택과 더불은 노동기금(勞動基金)의 형성등은 노동자의 협상력과 정부에 대한 완전고용요구를 증대시켰으며 이는 결국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압력을 초래하였다. 고용주와 노동자간 협상력의 이러한 변화는 임금협상에 있어 형평

7) J.Cornwall, *The conditions for Economic Recovery*, Martin Robertson, Oxford, 1983에서 재인용

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임금협상에 있어 생계비가 얼마인가? 또는 관계된 산업이외의 다른 부문에서의 임금수준은 얼마인가? 등의 형평성문제에 의해 임금결정이 크게 영향받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실질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증가는 형평성의 견지에서 임금상승요구를 발생시키나 이러한 형평성에 의거한 임금상승은 노동시장의 상황과 관계가 없다. 물가상승에 임금상승을 연동하는 임금연동제는 이러한 경우의 하나이다. 형평성의 원칙은 주어진 사회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임금크기와도 관계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비슷한 조건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산업에서의 임금증가는 다른 산업에서의 임금증가를 가져 온다(spill over효과).

Ⅳ. 현대 실업의 제양상

본장에서는 70년대 이후의 실업문제에 관련된 몇가지 쟁점을 다룬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 70년대 이후(즉 73년부터) 현재까지의 실업율 평균은 60년대 평균치(63~73년)에 비해 약 3배정도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고용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각국의 제도적 차이, 특히 산업조직(industrial relation system)의 차이에 따라 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Cornwall은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가 협력적이고 노사간 협상이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가 아니면 노동 자본관계가 대립적이고 노사간 협상도 기업차원에서 이뤄지는가에 따라 협력경제(cooporatist economy)와 다원

경제(pluralist economy)로 구분하고 이로부터 각국의 고용목표간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8] 본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차이에 관계없이 각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용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케인지언 실업과 고전적 실업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케인지언 고용이론의 핵심은 총생산이 단기적으로 총수요에 따라 조정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고용문제에 관한 많은 분석이 이뤄졌고 이로부터(특히 불균형학파의 분석)케인지언 실업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경제상황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예컨대 불균형학파는 가격이나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관계된 시장에서의 조정은 가격이나 임금의 변동이 아니라 양(量)의 변화, 즉 재고량의 변화나 양적할당에 의해 이뤄 진다고 보며 이때 시장이 과잉공급에 의한 공급할당이냐 아니면 공급애로에 의한 수요할당이냐에 따라 케인지언 실업 또는 고전적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인다. 즉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 품 시 장

노동시장	구 분	초과수요	초과공급
	초과수요	지속적 인플레이션	X
	초과공급	고전적 실업	케인지언 실업

8) J. Cornwall, 상기서 참조.

여기서 X의 경우는 상품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할 때 노동수요를 노동공급이상으로 증가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이다.

최근 들어 고전적 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한 경제내에서의 부분적 생산애로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생산애로요인으로서는 생산시설의 부족이나 신용할당과 같은 자금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급확대를 통한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도의 이윤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총수요와 별도로 총공급에 의해 고용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경쟁력'이란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전학파적 사고는 특히 임금비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케인지언 사고를 밀치고 재등장, 70년대 초 구미의 실업증가는 이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 즉 70년대 초 구미제국은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생산시설은 완전고용에 가까와서 공급애로를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임금은 생산과 독립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이는 산업조정의 배경하에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차 석유파동과 이로 인한 긴축정책은 수요하락과 유휴생산시설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공급부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급애로는 많은 부문에서 계속 존재하였다. 특히 불확실성의 증대와 사회보장금 및 순임금증가와 관련된 노동비용상승 그리고 이에따른 이윤의 하락은 자금공급이나 경쟁력하락에 관련한 공급애로요인을 강화하였다. 이에따라 고전적 실업과 케인지언 실업이 동시에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무차별적인 수요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케인지언 정책은 실패를 겪게 되었다.

현대 실업중의 중요한 한가지 형태가 고전적 실업이라는 진단은 단위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정책

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이러한 진단은 수요관리의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도 소비확대를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른 구분을 필요로 한다. 어쨌든 고전적 실업과 케인지언 실업에 관한 논의는 거시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정책수단의 선택으로 종결될 것이다.

- 수요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케인지언 정책
- 실업의 원인이 고전적 실업에 기인한다는 진단하에 기업의 이윤과 투자증대를 꾀하는 정책

이러한 두가지 정책수단의 선택은 Keynes-Hayek논쟁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임금의 효과에 대해서 케인지언 입장과 고전학파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즉 케인지언은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의 창출원인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을 낮추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을 증가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유보,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고전학파적 실업론을 따르는 입장은 투자자체가 생산시설확대와 고용의 증가를 가져 오는 것만이 아니라 자동화등 노동의 대체를 위한 투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임금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가격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2. 고용과 기술진보

70년대 초부터 구미경제가 높은 실업율을 겪기 시작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용문제를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기술진보와 밀접히 관련시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술진보의 고용

에 관한 효과는 전자, 통신등 첨단산업부문의 발전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고용과 기술진보의 관계는 이미 고전학파경제학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킨 관심사항이었다. 예컨대 A. Smith는 기술진보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 보았다. 그에 따르면 기계와 노동은 상호보완관계에 놓여·있으며 그 결과 자본축적의 결과로 도입되는 새로운 기계는 그 만큼의 신규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기술진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대해 D. Ricardo와 같은 학자는 새로운 기계도입이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를 통해 총생산량을 감소시키고 노동수요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산업혁명 초기 '기계에 의한 인간의 구축' 또는 '기계파괴운동'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계도입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Ricardo의 이론은 당시의 사실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기계에 대한 의존확대와 기술진보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대에 와서도 낙관적 입장과 비관적 입장이 서로 엇갈린다. 즉, 낙관론자들은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비관론자들은 노동절약적인 기술의 도입에 따른 고용감소를 지적한다. 기술진보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낙관주의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9]

- 기술진보에 의한 경쟁력 강화는 관계된 부문에서 상대가격의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수요와 생산의 증대를 가져 오고 이로 인한 간접적인 고용증가는 자본의 노동대체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감소

9) A. Sauvy, *La machine et l'emploi*, Dunod, Paris, 1980

효과를 상쇄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Marx, Wicksell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보상이론(補償理論)'이라는 이름하에 19세기부터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즉, 기계도입에 의한 노동의 자본대체는 일시적으로 실업을 발생시키더라도 이는 임금의 하락과 낮은 상품가격에 의한 구매력의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고용감소를 '보상(compensate)'한다

-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확대는 자본재부문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경제의 총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보다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에 의해 이탈된 노동자들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노동시간의 단축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산업혁명이래로 농업활동인구의 대폭적 감소, 재화생산의 다양화, 노동시간감소에 의한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변화는 기술진보가 국민후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기술진보는 위와 같이 고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체활동부문의 고용창출이 지연되는 한에 있어서는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실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실업은 인플레이션압력이나 국제경쟁력등의 이유로 인하여 거시적 총수요관리정책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대체가 1~2년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에 걸친 조정시차로 인해 새로운 고용창출이 늦어질 때 특히 문제가 된다.
- 새롭게 수요된 상품에 대해 공급된 상품의 기술적 특성이 불일치함으로써 수급괴리실업(disadaptation unemployment)이 발생할 수 있다.

3. 탈산업화와 서비스부문의 고용증대

탈산업화와 서비스 부문의 확대는 산업화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2는〉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표 2〉 **산업 및 고용구조(1987)**

(단위 : 구성비 %)

구 분	GDP 구 성			고 용 구 성		
	농 업	광공업	서비스[1]	농 업	광공업	서비스[1]
미 국	2	23	74	3	21	75
영 국	1	31	68	3	28	69
독 일	1	38	61	6	40	54
프 랑 스	4	27	69	9	28	63
일 본	2	31	67	11	25	64
한 국[2]	19	32	49	20	28	52

주 : 1) SOC 포함
2) 한국의 경우는 1989년 수치임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1990

서구 국가에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자영업 증가와 노동조합의 세력약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전통적인 산업(광공업)부문에서보다 낮다면 이는 경제의 전체적 성장속도를 저하하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의 고용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였다. 서구 국가에서 서비스부문의 고용안정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노동자의 상당한 부분이 자영업에 속해 있다. 또한 판매업, 보험업등의 부문에 있어서 그 종사자의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수입의 크기에 의존한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의 감소는 서비스 노동자의 수입감소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나 직업을 잃도록 하지는 않는다. 반면 산업부문에서는 임금이 보다 경직적이고 따라서 시장수요감소는 실업으로 귀결지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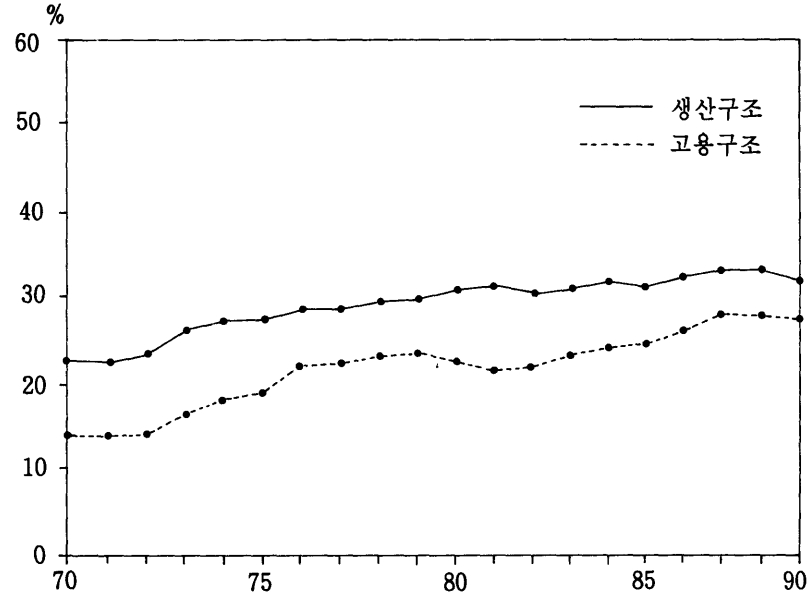
둘째,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부문의 생산물은 재고로 저장될 수 없다. 즉 서비스부문에서는 과잉생산 또는 과소생산이 발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서비스산업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경제에 있어서는 임금의 경직성과 재고조정 메카니즘에 근거한 전통적 케인지언 실업이론은 타당하지 못하다.

서비스부문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세번째 이유는 정부 서비스가 경기침체시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시 이로 인해 증가된 실업 및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고용이 필요하다.

서구제국에서 공통된 탈산업화와 서비스부문의 고용확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외가 아니다 (다음의 표3 참조). 1989년 현재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별비중을 보면 제조업(광업포함)이 31.9%이고 서비스부문은 49.1%인데 비해 고용구조면에서 보면 제조업은 전체취업자중에서 28.2%, 서비스부문은 52.3%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서비스부문의 생산력에 대한 고용비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서비스부문은 생산력에 비해 과잉노동력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서비스부문의 이러한 확대는 제조업부문에서의 임금절약적인 기술발전,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후기산업사회의 자연스런 이행이라기보다는 80년대 후반(특히 87년 이후)의 높은 임

금상승에 따른 소득증가와 지가상승에 의한 부의 증가가 가져온 소비구조에서의 변화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소득과 부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구성의 변화는 산업연관표로부터 유도된 서비스부문에 대한 소비지출이 민간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변화를 보면 잘 드러난다. 이는 1975년 0.254%로부터, 80년 0.291%, 그리고 1987년 0.333%로 계속 증가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고[10] 이러한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이 부문에서의 고용 및 생산이 증가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이러한 이상성장은 서비스 속성상 물가전가가 용이하고 도시집중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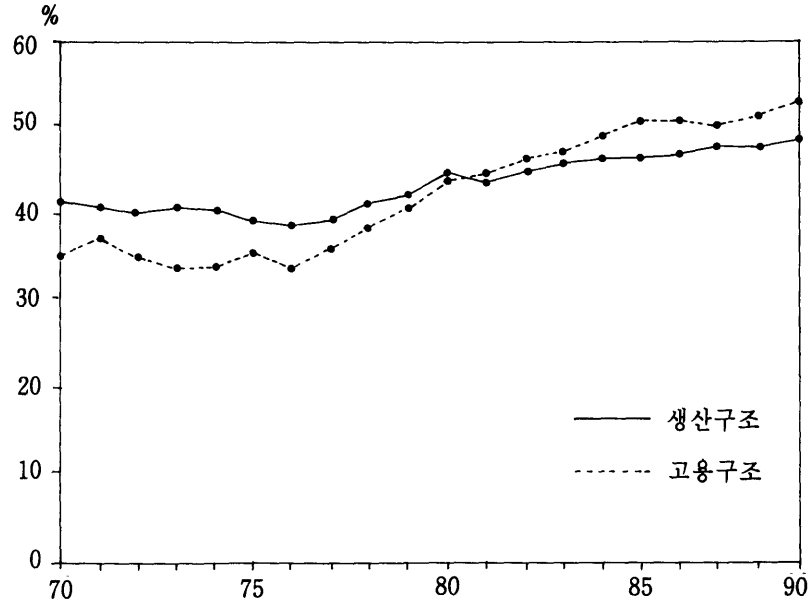
〈그림 1〉 **광공업부문의 구조변화**



10)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각호로부터 유도

의 특성으로 인해 지가상승 등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며 특히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번창은 그 자체가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왜곡시킴으로써 성장력을 저하시킨다.

〈그림 2〉 서비스 및 SOC부문의 구조변화



〈참 고 문 헌〉

Blaug, M., *Economic Theory in Retreo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2

Cornwall, J., *The Conditions for Economic Recovery*, Martin Robertson, Oxford, 1983

———, *The Theory of Economic Breakdown*, Basil Blackwell, 1990.

Friedman, M., "The Role of Monetary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8

Harberler, G., *Prospérité et Dépression*, Géneve, 1939.

Hayek, F.V., *Price and Production*, 1931. french ed., *Prix et Production*, Calmann-Lévy, 1974.

Kaldor, N., "Alternative Theories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3, 1956.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ry*, Macmillan, 1936.

Lévy-Garboua, V. and Weymuller, B., *Macroécomie contemporaine*, Economica, Paris, 1981.

Lipsey, R., "The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1~1957 : A Further Analysis", Economica, 27, feb., 1960.

Lutz, F., *The Theory of Interest*, Reidel Dordrecht, 1967.

Phillips, A. W., "The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1～1957", Economica, 25, nov., 1958.

Sauvy, A., *La machine et l'emploie*, Dunod, Paris, 1980.

Singclair, P., *Unemployment : Economic Theory and Evidence*, Basil Blackwell, 1987.

〈著者略歷〉

文 宇 植

서울大 國際經濟學科 卒
프랑스 Paris－I 大學 經濟學博士
現 國民經濟制度研究院 責任研究員

經濟解說資料 5

失業理論의 發達과 爭點

1990年 12月 28日 登錄
登錄番號 第16－401號

1991年 7月 日 印刷
1991年 7月 日 發行

發行人 嚴 永 錫
發行處 國民經濟制度研究院
서울市 江南區 道谷洞 951－12
電話 561－1400
印刷處 一 志 社

破本은 바꿔드립니다.
本書의 無斷複製行爲를 禁합니다.

값 1,500원